

“현대차 범죄 이제 그만”

현대차 불과 범죄 규탄,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 “노조법 개정, 원청 교섭 쟁취하자”

금속노조 완성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장대비를 뚫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자동차 재벌의 불법과건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알리고 규탄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가 7월 1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과건 범죄행위 규탄,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원청 현대차 재벌이 직접 교섭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내하청, 특수고용이라는 허울로 불법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현대차 1만명, 기아차 3천 5백명, 현대제철 1만명, 자동차 판매 1만명, 현대모비스·위아 계열사 1만명 등 4만 5천여명에 이른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그룹에 ▲25년 불법과건 사용 사죄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 ▲비정규직 당사자 직접교섭

▲비정규직 착취 중단 ▲직접고용-정규직 전환 시행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노조법 개정을 외쳤다.

윤성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지회장은 결의대회 투쟁사를 통해 “현대차 재벌은 미래차 먹을거리 확보라는 핑계로 물량, 공정, 인력 충원 등 각 공장 사이 불화를 조성한다” 라면서 “더불어 정규직과 불법과건·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 조직의 균열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라고 꼬집었다.

강기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5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19년 만에 고작 3천만 원이라는 벌금으로 현대차 불법과건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했다” 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니 현대차는 불법과건 범죄를 더욱 저지르고 있다” 라고 분노했다.

김광수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 대법원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진짜 사장

은 현대차라고 판결했다” 라면서 “하지만 노조법 2조가 가로막고 있어서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와 절대 교섭하지 않는다” 라고 노조법 개정의 필연성을 역설했다.

김광수 지회장은 “국회가 개정하지 않더라도, 윤 씨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노조법 개정을 포기하지 말자” 라며 “열사가 바라고 동지들이 원하는 원청사와 교섭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쟁취하자” 라고 결의했다.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치른 금속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4공장 문 앞으로 행진했다. 4공장 문 앞에 도착한 금속노동자들은 문 화제를 열고 결의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